

김기식 · 드루킹 사태

우파의 위선적 공세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도 부패했음을 보여 주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4~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임무 완수”
선언에도 시리아 위기는
여전하다

3면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3면

김기식 낙마와
드루킹 파문

7면

최저임금 개악
국회의 개악 논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8면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7면

공공부문 투쟁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집배원 인력 충원 요구

2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이정원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돼 간다.

노동부는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전환 인원(17만 5000명) 중 기간제의 81.5퍼센트, 파견·용역의 41.2퍼센트에 대해 전환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제시한 1단계 대상자 중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이 상반기 내에 마무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곧 파견·용역, 2단계 대상자(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상당한 성과로 포장하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1단계 대상자인 철도노조 비정규직 지부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기간제교사노조는 최근 각각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이 노동자들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전환 예외 사유를 이유로 전환에서 이미 제외됐거나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철도는 사측이 비정규직 9000여 명 가운데 고작 1396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한다(3750명의 청소·경비 업무는 자회사로 전환한다). 공기업 자회사는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자회사에 고용돼 있는 열차승무원, 역무원, 차량정비원, 상당원이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될 처지에 있다.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금지 등 법제도가 완비돼야만 직접고용 할 수 있다며 책임 회피나 하고 있다.

그래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도노조 서울본부가 함께 4월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도 계속 투



말뚫인 ‘비정규직 제로 시대’ 4월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을 이어 가고 있다.

5개 발전사 비정규직도 비슷한 상황이다. 발전사 사측이 의뢰한 컨설팅 최종 보고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설비운전, 계측제어 정비 업무 등을 아예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이 업무들이 전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외하거나 민간위탁 업무라 1단계 대상이 아니라고 미뤘다. 그 결과 보고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고작 2퍼센트만 직접고용 전환 인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들은 대부분 발전사 민영화 이후 외주화된 것으로, 지금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다. 발전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에 항의해 4월 1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기간제 교사 4만 7000여 명은 기간제법 등 ‘타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전

환 제외 사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여기에도 예비 교사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기간제 교사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말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상시지속업무라고 하면서 말이다. 각 시도 교육청들은 아예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들은 단지 전환 제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고(위협)를 당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란을 피하고자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는 사례가 늘었다. 게다가 정부가 기간제 교사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해고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4월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향적?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

부가 재정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운 데서 비롯했다.

우파들은 그동안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비난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1년의 성적표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정부가 외면한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의 기간제 중 고작 29.4퍼센트, 파견·용역의 60.3퍼센트만 잠정 전환 인원에 포함됐다(실제 전환 결정은 이보다 더 적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집계에도 포함하지 않았고, 20만 명이 통째로 제외됐다.

광범한 예외 사유와 재정 최소화 원칙에 따라 각 기관들은 전환 규모 최소화에 열을 올렸다.

둘째, 전환 방식도 문제다.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

은 직접고용을 최소화해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결국 이는 (잘해야) 미미한 처우 개선에 머물러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이 별반 개선되지 않는다(심지어 일부는 임금이 깎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적용하겠다고 내놓은 표준임금모델은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했을 뿐 이 방안을 폐기하지 않았다. 이미 이 모델을 도입한 기관들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삭제 조처가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 대책에 항의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신정환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 문제는 사용자인 정부조차 인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집배원들은 주 60시간 가까이 일한다. 지난 한 해에 집배원 12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우편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이런 끔찍한 현실 때문이다.

집배원들은 토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택배 배달)에 시달린다. 집배원의 압도 다수가 토요일 택배 폐지를 원한다. 지난해 말,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집배노조가 전국의 집배

원 30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요 택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3.1퍼센트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토요 택배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올해 1월, 우정사업본부와 당시 전국우정노조(한국노총 소속 교섭대표 노조) 집행부는 ‘이원화 주 5일제’ 시범 실시를 합의했다. 이원화 주 5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상우편을 배달하는 지역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포를 배달하는 지역으로 노동자들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인력 충원 없이 이뤄져 집배노조 등 집배원 다수는 “꿈수

주 5일제”라고 반발했다. 이동 거리가 늘고 배달 시간이 증가해 노동강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미 2015년 토요 근무 재개시 제안되었던 정책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폐기된 정책이다.” (집배노조)

그래서 노동자들의 반대가 상당하다. 현 우정노조 집행부의 한 간부는 “현재 사측과 이원화 주 5일제를 폐기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꿈수 주 5일제”가 폐기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토요 근무는 그대로 진행된다.

게다가 우정사업본부 사측이 필요

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노동시간을 줄여 그 많은 일을 처리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산하 우체국들을 쥐어짜다 보니, 곳곳에서 노동조건 악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집배원들의 초과 근무 신청을 반려해서 ‘무로 노동’으로 내몰거나 정규 근무시간 중 일을 마치고도 종용하며 커피 마시는 시간까지 감시한다고 한다.

심지어 인력 부족 탓에 집배원들이 담당구역 외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강제 연가 사용을 독촉해서 남은 집배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이 될 수 없다. 인력 충원이 선행해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와 노동조건 악화가 없어야 한다.

집배노조는 집배원 노동시간을 한국 노동자 평균 수준으로 줄이려면 즉각 4500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측이 내놓은 ‘2022년까지 단계적 1000명 충원’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집배노조는 즉각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5월부터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집배 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사진: 미 언론

트럼프는 13일 공습에서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시리아에 퍼부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임무 완수” 선언에도 시리아 위기는 여전하다

시리아 위기를 가리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미국과 러시아] 양쪽 모두에서 제기돼 왔다. 나는 이 말을 한시도 믿은 적이 없다.

쿠바 위기는 [미국] 존 F 케네디 정부가 소련의 수소폭탄 중거리 미사일이 쿠바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면서 촉발됐다.

당시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미국의 전복 시도(1961년 4월 피그만 침공 등)로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또, 미국에 크게 뒤지는 장거리 핵미사일 보유 역량을 만회하려고도 했다.

[미국 남부] 마이애미에서 50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고 1958년 혁명 전까지는 미국의 준식민지였던 이 작은 섬에 걸린 판돈은 몹시 컸다. 당시 소련이 쿠바에 전술 핵무기를 잔뜩 배치했음을 오늘날 우리는 안다.

만약 미국 국방부가 정말로 쿠바를 침공했다라면 쿠바는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지구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것이다.

다행히도 케네디는 장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와 협상을 타결지었다. 미국이 러시아 인근 터키에 배치했던 미사일을 철수시키고 쿠바를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대가로 소련은 쿠바의 미사일을 철수시켰다.

반면, 시리아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중동 전선에서 군사적으로 전면에서 나서길 꺼리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이다. 버락 오바마는 시리아에 개입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무인폭격기로 이슬람주의자들을 살해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오바마에게 진정한 위협은 중국이었다.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국가’가 부상하자 오바마는 마지못해서 제한된 병력을 이라크와 시리아에 보냈고 아프

가니스탄 철군을 미뤘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정책을 정말로 뒤집은 것은 아니다. 몇 주 전 트럼프는 미군이 시리아에서 “아주 조만간” 철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전했다. “전임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시리아에 걸린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고 긴 내전을 끝낼 능력도 크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두 가지 이유에서 여전히 위험하다.

첫째, 그가 매우 충동적이라는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TPP는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오바마가 갖은 노력을 다해 추진하던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한 일의 하나가 TPP 탈퇴였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 결정을 되돌릴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힘써 왔음에도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를 두고는 러시아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TPP

둘째, 오바마에 견줘 트럼프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 훨씬 친밀하다.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지배자들은 둘 다 자신들의 주적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고자 한다. 이란은 푸틴과 함께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이다.

그러나 쿠바 위기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소련과의]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미국 국방부를 채웠었다면, 지금의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시리아를 둘러싼 위기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데 힘을 기울인다.

그래서 미국은 미사일로 아사드 정권의 화학 무기 시설을 때리면서도, 시리아 여기저기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을 겨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오늘날 시리아에 이처럼 많은 외국군(이란, 터키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있다)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은 시리아에 걸린 미국의 이해관계가 비교적 작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시리아를 둘러싼 투쟁이 더 커다란 전쟁으로 치달을 위험을 키운다.

이런 분석 속에서 지배자들의 연사를 봐야 한다. 미국에게 러시아는 성가신 존재이지, 과거 소련처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대가 못 된다. 그러나 서방 권력자들의 상당수는 푸틴이 자신들의 약점을 캐내려하는 것을 두고 “신냉전”이라고 호들갑을 떠난다.

특히 어리석은 호들갑은 4월 10일 영국의 UN 대사 캐런 피어스가 한 말이다. 그는 “(마르크스는) 자신의 가르침 대로 탄생한 나라가 지금 시리아를 지원한다며 벌이는 짓을 보면 무덤에서 땅일 질 것”이라고 했다. 이 양반은 러시아 국가가 1917년 혁명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 왔고 푸틴이 모델로 삼는 것은 마르크스나 레닌이 아니라 차르와 러시아정교회의 권위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냉전 운운하는 히스테리는 오늘날 도처에서 발견된다. 만약 트럼프가 자기 앞가림을 위해 이런 연사에 맞게 실천하려 든다면, 상황은 정말로 고약해질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00호 / 번역 김중환

미국의 이란 핵합의 흔들기 생떼

나는 때리지만 너는 맞는 게 아니다?

김중환

미국이 이란에 ‘나는 약속을 뒤집지만 너는 계속 지켜라’ 하고 우기고 나섰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이 의회에 출석해, “이란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제재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란 핵합의의 골자는 서방이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합의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라고 비난해 왔고, 다음 달 12일 이란 제재를 도로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이란 제재 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날짜가 돌아오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할 공산이 크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이란에 투자하는 기업까지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제재 부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란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미뤘다. 그래서 이란 측은 ‘핵합의 파기 운운만으로도 핵합의로 약속받은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이미 남아있다고 불평한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 부활을 확정하면 이란이 이를 핵합의 파기로 받아들이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은 뻔하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뻔뻔하게 ‘제재는 가하겠지만 핵합의 파기는 아니다’ 하고 우기는 것이다.

생떼 속에 묻어내는 미국의 난처함

현재 미국 지배자들은 세계 지배 전략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여기에 외교적 · 경제적 ·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그래서 중동에서 개입을 일부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왔고, 2015년 이란 핵합의는 그 결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중국에 적대적이고, 다른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중동 개입을 줄이고 싶어 한다. 다만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핵합의가 이란의 경제 성장을 돕고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해 중동에서 이란이 자신들에 도전할 힘을 키워 준다고 본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상대로 호전적으로 나서고 미국은 개입(적어도 직접적 군사 개입)은 줄이길 바라는 듯하다. 이런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갈수록 호전적으로 나서는 것을 거들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면서 5월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대표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반면, 지리적으로 중동에 좀더 가까운 유럽 지배자들은 이런 구상을 선뜻 지지하지 않고 이란 핵합의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한다. 그들이 미국보다 약속을 더 중시하거나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이는 중동의 역사를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은 중동에서 미국만큼 군사력이나 동맹 관계가 강하지 못한 처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 이스라엘 대 이란’ 갈등이 격화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까 봐 우려한다. 지금도 유럽행 난민의 상당수가 중동 생지옥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인데, 난민이 더 많아지는 것도 싫고 이란 석유를 개발할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아깝다. 그래서 이란 핵합의 파기에 반대한다.

미국의 문제는 유럽 국가들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3년 유럽 국가들 다수의 반대로 무릅쓰고 이라크를 침공한 때와 비교해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 하락은 더 심해졌고 중동 개입에 대한 국내적 불만은 더 커졌다. 최근 시리아 공습에서 미국이 영국 · 프랑스와 함께한 데서 보듯, 미국은 중동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바란다.

지금 미국이 ‘약속을 깨더라도 약속을 깨는 건 아니다’라고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데는, 흔들리는 중동 패권을 다잡을 방안을 놓고 지배자들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중동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아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



평화협정의 역사적 사례들		
합의	내용	결과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 결성	★ 제1차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1919년에 체결. ★ 전쟁 재발을 막고자 베르사유 조약을 근거로 국제 연맹 결성 ★ 이후에 부전(不戰)조약과 여러 군축 조약도 체결됨.	1939년 제2차세계대전 발발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	★ 1939년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 그리고 동유럽 지역의 세력권 분할. ★ 이로써 나치 독일은 영국·프랑스와의 전쟁에 집중 할 수 있었음. ★ 소련은 서부전선에서 영·프·독이 서로 싸우면서 힘을 다 빼기를 기대. 민족 이기주의적 발상.	★ '사회주의를 표방한 소련이 나치와 손잡은 일은 수많은 반파시즘 투사들을 절망케 함. ★ 1941년 히틀러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 서 불가침조약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짐. 전쟁으로 소련 인민 2000만 명 이상 희생됨.
1993년 오슬로 협정	★ 미국의 개입으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와 이스라엘 정부가 맺은 평화협정. ★ PLO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점령 아래 자치 정부를 꾸리기로 함.	★ 자치정부는 허울일 뿐이었고,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대부분을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영토 확장을 지속함. ★ 오슬로 협정이 거짓 약속임을 확인하고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에 거대한 대중 항쟁을 일으킴(2차 인티파다).

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

김영익

많은 사람들이 정부 당국 간의 협정·협상이 평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그런 기대의 밑바탕에는, 결국 지배자들이 마음 먹고 서로 합의한다면 적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이 있다. 남북한 지배자들의 힘이 거기에 못 미친다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화로 조정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안전 보장 약속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 체제 구상과 요구가 여러 형태로 계속 등장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20년 동안 강대국들이 평화 공존을 약속하며 맺은 협약이 거의 100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협약들은 1914년 유럽 강대국들이 일제히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 데 아무 소용 없었다. 제1차세계대전 종결 후, 지배자들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면 여러 평화 조약을 다시 맺었다. 그러나 불과 20년 후 인류는 훨씬 더 큰 전쟁인 제2차세계대전을 겪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들 간 조약을 근거로 한 평화는 막간극으로 끝나거나, 대중의 커다란 환멸과 희생을 낳는 것으로 귀결돼 왔다.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제국주의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5면에서 이어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북한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커넥션 의혹도 미국이 쥐고 있는 패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 들이밀 때는 계속 나올 것이다. 지금 미국은 시리아 문제를 의식하며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영구히 가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자국의 필요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남북 관계도 이 과정에 연동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영구 평화란 없다. 특히, 1930년대 대불황 이후 가장 큰 경제 침체의 여파와 미국 제국주의의 상대적 지위 하락 속에 불안정이 점증하는 상황이기에 더욱욱 그렇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다면 지난해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공산이 있다. 그리 되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불탄 같은 전쟁광들이 바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자본주의 지배자들 간의 협상과 타협으로는 제국주의가 낳는 불안정이 항구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경쟁 체제이고, 이 세계 체제와 경쟁은 자본주의 지배자들도 근본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실체이고 경향이다. 이미 100여년 전부터 레닌과 부하린 등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해 온 이 통찰은 지금도 유의미하고 적절하다. 제국주의적 경쟁,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에 주는 압력은 근본적으로 남북 두 정상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다. 한반도 평화 실현 또는 이를 위한 안정적 조건 마련조차 남북 대화로,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으로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우익처럼 반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정상회담을 지지할 수도 없다. (지지나 반대냐가 아니라 분석하고 들춰내고 그 여백을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 간 대화에 기대를 걸고 그 성공을 바라게 된다면, 기층 운동의 구

실은 “남·북·미 당국이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것”에 국한될 것이다. 실제로, 기층 운동이 협상 당사국들에게 “합의를 확고하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 되면 기층 운동은 협상 주체인 정부의 위력을 인정한 채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저 협상 과정에 제시될 만한 의제(가령 쌍중단 같은)를 정부에 조언하고 응원하는 구실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은 정부 당국 간 대화의 향방에 따라 사기가 올랐다 내렸다 할 것이다. 구경꾼 미국이 언제 변심할지 모르니,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을 위한 민족대 단결을 촉진해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민족 단결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계급 분단을 더 선명하게 하는 동인이다. 당장, 단결을 촉구하는 대상일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나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김영익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라고 규정했다. 즉, 레닌이 보기에 제국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이 아니고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특정 정책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역학에서 비롯한 발전의 결과였다. 기업들은 이윤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즉, 축적)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각 나라 안에서 시장 경쟁의 결과로 경제력이 소수 대기업들에게로 집중된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점차 국가의 이해관계와 융합되는데, 국가는 국익을 내세워 대기업들을 정치적·군사적으로 지원한다. 이쯤 되면, 기업들은 좁은 국경을 넘어 점점 더 세계적 수준으로 활동한다. 자연히 자본가들의 경쟁도 국제화된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국 대기업들과 손잡은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국경 너머로 확장한다. 즉, 군대와 무기를 육성하고 해외에서 무력을 과시하며 세력권과 동맹을 형성한다. 그리고 경쟁에서 우위에 선 소수 강대국들이 세계의 나머지를 지배한다.

그러나 결국 경쟁의 승패는 각국의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고, 강대국들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강대국들을 상대로 전쟁까지 벌이게 된다. 강대국 지배자들이 전쟁을 피하려고 영향력, 자원, 세력권 등을 놓고 합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영구히 유지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체제의 역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경제 발전의 속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불균등 발전). 그래서 각국 경제력의 상대적 크기 도 계속 바뀌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순위도 고정 불변하지 않고 계속 바

뀌게 된다. 그러면 성장하는 국가가 기존보다 더 많은 몫을 요구하게 되고, 기존의 패권 국가는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지키려고 애쓰게 된다. 이런 과정 때문에 국가들 사이의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 경쟁은 다시 격렬해지고 갈등이 첨예해지며, 끝내 전쟁의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

근본 대안

이처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이윤 획득을 목표로 맹목적으로 경쟁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비롯한다.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자신들도 근본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쟁에 운명적으로 직면해 있다. 다른 자본가가 자신과 똑같이 착취하고 축적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자본가들이 착취하고 축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 축적의 잇단 자극이 경제 공황 같은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지라도, 자본가들은 멈출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들도 국익을 놓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며 경쟁국의 무장력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자극을 끊임없이 받는다. 군비 증강의 속도를 늦추게 되면 경쟁국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그런 맹목적 경쟁이 지배자들이 애써 구축한 ‘문명’을 모두 파괴하게 될지라도, 이 체제의 수혜자이기도 한 지배자들은 이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지배자들의 ‘이성’에 기대어 영속적이고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이윤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세력인 노동계급의 투쟁만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면 자본주의를 쓰러뜨리고 진정으로 이성적인 토대 위에서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영구 평화”는 그런 상황 전개 속에 서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섰으나 한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며 한·미·일 공조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서도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오락가락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 진짜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생각이 없다. 비록 규모를 “축소”했다고 발표했으나 대북 침략 연습인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했다. 사실 지난 7~8년 동안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나날이 확대돼 온 것을 감안한다면, 이게 진정한 “축소”인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사드 배치를 용인한 데 이어 정부는 사드의 영구 배치를 위한 기지 시설 공사를 강행할 태세다. 또한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섰다. 이미 한국은 매년 지속적으로 군비를 늘려 육중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국가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방비 증가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런 점들은 모두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북한을 자극할 테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데서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정부

당국 간 대화를 지켜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평화운동의 기초를 놓으려고 애써야 한다. 미국의 패권 정책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 문제에 항의하는 독립적인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비 증강,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기 개발 등 노동자와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위험에도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 운동의 구실이 중요하다. 레닌이 지적했듯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이고, 이를 쓰러뜨리는 데서 노동계급의 힘만한 것은 없다. 제국주의를 위협할 만한 노동계급의 잠재력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추구해서는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맞서 자신의 일자리와 임금을 방어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잠재력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혁명적 좌파의 건설이 필요하다.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동훈

GM 사측이 4월 20일까지 복리후생 비용 1000억 원 절감과 군산공장 폐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GM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국GM의 빚 3조 원 모두를 GM 본사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 고의 부도를 내겠다는 셈이다.

한국GM 전체 노동자의 16퍼센트나 되는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한국GM 노조가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조차도 부족하다며 **더한층의 양보를 압박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GM 사측은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도 민·형사 상의 제기를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았다. 한국GM 노조가 추가적인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마저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GM 사측은 '고통 분담'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스스로는 조금치의 손해도 볼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GM은 산업은행과 경영평가를 하기로 약속하고서도 현재까지 기초적인 실사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 또, 산업은행이 요구한 '출자전환 후 차등감자'(한국GM의 대주주인 GM의 지분을 더 많이 줄이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손실은 떠넘기고, 이익은 가져가 한국GM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면서 말이다.

양보는 법정관리의 대안이 못 된다

한편,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은 "미국 GM이 산은과 협의 없이 한국GM의 청산을 선택할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GM의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은



GM의 해외 철수 사례들을 보면, 법정관리 협박에 밀려 양보해도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법정관리 신청은 주종 특별 결의 사항에 해당돼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며 GM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조도 무리한 요구를 유지하기보다는 어려움을 함께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노조의 양보를 중용했다.

이 때문에 4월 20일까지 노사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측이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680명 중 일부는 전환배치 하는 대신, 노조는 복리후생 삭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말이다.(그러나 사측은 군산공장 나머지 노동자들의 5년간(!) 무급 휴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GM 노동자들이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 한국GM의 적자는 GM 본사의 전략에 따른 유럽 철수, 소형차 생산 감소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손실을 떠넘기고, 이전가격을 높게 산정하고, 연구·개발비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부실을 키워 왔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게다가 GM이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 등 노동조합의 거듭된 양보가 생산 지속과 일자리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거듭된 조건 하락과 인원 감소로 노동자들이 싸울 자신감이 없어진 경우가 많았다.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 되더라도, 비정규직 해고로 인력 감축이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GM의 단계적 철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법정관리 위협에 굴복해 또다시 인원 감축과 임금 삭감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국유기업화 요구하며 투쟁해야

사실 법정관리 신청은 GM에게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법정관리에 들어

가면 한국GM 채무의 상당수가 소멸돼 GM 본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GM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구조조정의 주도권이 법원으로 넘어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한국GM 사측이 법정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점이나, GM의 미국 소형차 공장에서 또다시 해고를 추진하는 점 등을 보면, 한국GM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삭감이 진행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이 결정돼 모두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GM 노동자들에게 서서히 말라 죽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진정한 대안은 정부가 한국GM을 국유기업화해 일자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GM에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여러 특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돈은 GM 사측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GM 부실에 일부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퍼센트를 가진 2대 주주로, 지난해까지는 주요 결정 사항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사외이사과 감사들의 추천권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자신의 대출금 회수에만 신경 썼지, 한국GM을 제대로 견제·감독하지 않았다.

국유기업화를 쟁취하려면 점거파업 같은 단호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처하고 일자리 문제가 부각된 지금,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운다면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김기식 낙마와 드루킹 파문 우파의 위선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2주 만에 사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파김치관(국회의 국정감사 대상 국가기관)의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혹이 결정타였다. 모든 의원들의 관행이라는 변명은 엔지오 출신 개혁파 관료를 기대한 개혁 염원 대중 다수의 실망만 자아냈다.

한편, 민주당 당원인 드루킹이 댓글 추천수와 조회수 등을 조작한 일이 드러났다. 드루킹의 전력을 볼 때 이 방법들이 문재인 지지에 활용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일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지지를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다. 정권의 호재인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문재인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의도한 것은 개헌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보수 야당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청와대 주도 개헌 논의는 김이 빠졌고, 김기식 낙마와 드루킹 파문은 문재인 식 '개혁' 뒤에 숨은 위선만 드러냈다. 결국 정권 실세인 조국, 김경수 등이 곤경에 처했다.

김문성

이 기사의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미국 교사 파업 지도부의 복귀 명령 거슬러 투쟁을 이어가다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교사와 비(非) 교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지도부의 배신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4월 12일 오클라호마주 교원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조 위원장 알리샤 프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수만 명이 9일 동안 주의회 의사당을 메우고 시위를 벌였지만, 주의회는 4월 6일 이후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그날은 공화당 소속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메리 팔린이 주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날이다. 그 예산안에서 교사들의 연봉 인상분은 6100달러(한화로 약 650만 원)다.

파업 노동자들은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교사 연봉 1만 달러(한화로 약 1060만 원) 인상



사진 출처: Cara O'Connor, Henson

과 교육 예산 대폭 확충을 요구한다.

이어서 프리스트 위원장은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 현 주정부를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호소에도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교사 르네 제르던은 이렇게 말했다. "노조는 파업을 끝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프리스트의 말은 변명처럼 느껴져요."

조합원들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 '오클라호마 교사 파업 — 바로 지금!'

이 이달 15일에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 응답자 중 88퍼센트가 파업 지속에 찬성했다.

몇몇 교사들은 조합원증을 찢어 버리고 있다. 계속해서 주의회 앞 투쟁에 참가하려고 연가와 병가를 몰아 쓰는 교사들도 있다.

한편, 켄터키주(州)에서는 교사들이 연금 계약에 맞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사들이 연가 파업을 벌이고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해, 켄터키주 소재 교육구 39곳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다.

미국 전역의 교사들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은, 오클라호마주 교사들이 파업이라는 무기를 휘둘러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알리스터 패로우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00호 / 번역 김준호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8

7월 19일(목)~22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해외 연사 로라 마일스

영국의 노동조합 활동가이자 마르크스주의자다. 대학 강사 출신으로(현 67세) 대학노조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현재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고, 대학노조 내 사회주의자들과 좌파들로 이뤄진 'UCU좌파'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영국 최초로 노동조합 전국집행위원으로 선출된 트랜스젠더이기도 하다.

맑시즘2018에서 연설할 주제

- ▶ 노동현장에서 차별에 맞서 싸우기(개막 집회 연설)
- ▶ 신자유주의가 교육과 교육 노동자에게 끼친 해악과 그에 맞선 투쟁
- ▶ 심리학과 마르크스주의
- ▶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 ▶ 트랜스젠더와 마르크스주의

이 밖에도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수십 개 알짜 주제로 맑시즘2018에서 발제합니다.

※ 발제자와 주제가 웹사이트(www.marxism.or.kr)에 업데이트됩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장우성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지난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면 중단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당사자 의견청취를 재개했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고,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자 보수 언론들은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특히 4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고용쇼크'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3월보다 각각 9만 6000명, 2만 명 감소한 것을 근거로 낸다. 지난 2월 이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가 각각 6만 3000명과 8만 4000명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부작용?

그러나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미 10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돼 왔다.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는 경기 부진 속에 더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중소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퍼센트가 전년 동기 대비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이었던 2016년 2월과 3월에도 도·소매업 취업자는 각각 11만 8000명, 14만 2000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감소도 최저임금을 탓하는 것은 억지다. 정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은 각종 생활물가 인상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그림 참고)

이런 현실 때문에 경제부총리 김동연도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4월 국회 개악 추진 가능성 경계해야

그럼에도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이 '최저임금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인상을 완화 등 기업주들의 부담을 더는 조치들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미 정부는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보완대책에 5조 원을 쏟아 붓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연간 7조 1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이미 연간 임금 인상액의 70퍼센트 수준을 지원받으면서도 업살을 떨면서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 일정을 보면, 이번 주 내에 최저임금 개악을 위한 환노위 일정이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5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6월 지방선거 때문에 5월에는 국회의 정상적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월 중에 제도 개악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개월 단위 상여금을 포함하고 숙식비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1개월을 넘겨 지급하는 상여금을 월할 지급할 경우 이것도 포함하지는 말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상여금에 더해 숙식비까지 포함하는 내용

을 담은 신보라의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내에서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줄 피해를 지적하며 논의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 성과 허물기"

4월 13일 국회 의견 청취에 앞서 양대총은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절이 포함됐다. 3월 민주노총 중집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관련 민주노총의 법 개정 요구안에도 이 구절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저임금층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양대총이 논의의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지 염려한다. 4월 6일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집담회'(이하 최저임금 집담회)에서 한 학교비정규직 활동가가 이 같은 물음을 던졌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4월 국회 논의 저지, 제도 개선은 내년도 인상률과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통상임금과는 개념과 기준이 다르다. 저임금층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고,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를 없애는 것이라며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집담회에서 마트 노동자 김진숙 씨는 말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어, 매년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그나마 있는 상여금을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길바닥에서 파업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투쟁의 상징인 수당,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그동안의 투쟁 성과를 하루아침에 백지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여성연맹 소속의 철도 고양차량기지 청사 이관호 지회장은 말했다.

"고양KTX 차량 기지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상여금 12만 원, 연차수당 8만 원을 모두 합해도 월 임금이 18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상여금마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저임금에서 벗어나는 꿈은 다시 요원해진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7월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배치하고 있는데, 법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이런 투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지금 이 투쟁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정의당이 최저임금 논의에 회의적이더라도 여기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사용자들과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 정당, 그리고 정부·여당이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국회 밖의 노동자 투쟁뿐이다. 민주노총은 일시적인 논의 지연요행을 기대하기보다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낳는 것은 아니다

